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60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0. 25(금) 15:00~18:0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2019년 10월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기존에는 8개의 보고안건으로 안내가 되었습지만, 아르코비전 2030 선포식 개최결과 및 후속 계획 보고와 별첨으로 나눠드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 2개의 의결안건을 추가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현재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의사봉

- 회의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257차 회의와 제 258차 회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257차 회의에서는 6개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4개는 원안 의결, 2개는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258차 임시회의에서는 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3개는 원안 의결, 1개는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제 259차 회의에서는 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지난 제 257차 회의와 제 258차 임시회의의 주요사항에 관해서 질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3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19년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제교류부 오선명 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선명 국제교류부 차장

- 제 772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공모 결정(안)인데요. 청년국제역량강화 역량 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250개 단체 중에서 4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44개의 선정 예술가 또는 단체의 사업진행과 성과공유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국제예술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지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관처 공모는 오늘 의결이 되면 10월 28일 월요일부터 2주간 공고가 되고요. 11월 중순에 심의회의를 하고 결과발표는 11월 말에 진행되어서 청년국제예술 44개 단체들은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성과공유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주관처 1개를 선정하고요. 1억입니다.
성과공유회뿐만 아니라 토론회 같은 전시미디어 같은 부대행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붙임1을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 4월에 별도공모로 44개 단체가 뽑혔습니다.
선정단체가 주로 해야 할 일은 성과공유회, 44개 단체의 PT 등을 진행하게 되고 부대행사로 토론회, 네트워크 파티, 전시회 그리고 단체가 원한다면 쇼케이스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사업은 사실 평가나 결과가 없는 사업이라 리서치 작업 그리고 성과공유를 듣는 작업이라 결과물은 없지만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체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저희가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회진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서 PT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자료 총 3개고요. 실적을 위한 자료는 '선택' 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안건번호 772호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성과공유회 주관처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교류사업의 특성을 넘어서서 네트워크 하고 청년예술가들이 낸 국제교류 성과를 한군데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 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지금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라고 해서 44개 단체의 사업이 있고요. 그들을 네트워킹 하는 행사의 주관처를 공모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하는 국제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주관처를 선정할 때 국제적인 교류나 네트워킹의 실적이 있는 단체나 조직이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분들이 올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에 대한 예측이 좀 안 되네요.

○오선명 국제교류부 차장

- 청년사업을 처음 시작한 취지는 44개 단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9개의 단체와 15개 단체로 나눠집니다. 15개는 개인으로 신청한 장르 불문의 단체고요. 29개 단체는 저희가 미션을 줬습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고 3명에서 최대 7명으로 여러 장르를 합친 크루를 만들어 나가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는 굉장히 프로젝트가 원활하여 기간이나 극장, 페스티벌과 조율되고 성과가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많은 단체들은 그 수준까지 못 가고 미션이나 네트워킹을 시도해 보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가 아르코의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사업만큼은 실패해도 좋으니 나가서 원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라는 것이라서 성과보다는 그들의 말들, 그들만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또는 그런 공유회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딱딱한 공유회 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풀 또는 네트워킹 안에서 국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팀들은 본인들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들을 알리는 정도의 행사를 기획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구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기획하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이것을 수행 할만한 어떤 단체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업패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지켜보면서 1년간 같이 섞어가면서 관계를 맺고 자극을 유도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사업공유회나 행사 성격의 것들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미리 선정해서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뭘 끄집어 낼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행사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연말에 공모를 하니까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이희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아주 전문적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킹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고요. 처장님 말씀대로 담당자들이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지만, 임차료 등을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사업보조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관처를 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처 선정을 하고 담당자들과 네트워킹한 결과를 국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향후에 국제교류 활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공유회 자리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이희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오선명 국제교류부 차장

- 예,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운영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면, 사무처장님의 지적은 원래 10억으로 총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1억은 별도로 해서 평가와 네트워크 성과공유회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 미리 설계한 예산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느냐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올해 당장 대안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내년 사업을 할 때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희경 위원님과 이승정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네트워크 파티나 사례공유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행사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택적으로 쇼케이스, 미디어 전시 및 책자전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무슨 교류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명 국제교류부 차장

- 예. 지금 44개 단체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세계 각 국에 가서 하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장르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사업만큼은 모든 장르가 팀을 만들어서 나가라는 미션을 드렸고요.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난민 인터뷰를 한 것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서 벽에 색칠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가방을 뉴욕시장에 가서 팔고 싶다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오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데요. 장르가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어느 팀은 쇼케이스를 원하는 팀도 있고 어느 팀은 영상을 하고 싶다는 등 너무나 다양해서 일단 PT발표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주관처가 선정되면 단체를 테마별로 묶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단체는 가볍게 쇼케이스를 하시고, 미디어 전시는 미디어를 하시는 등 선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심의계획은 이 정도로 보시고 단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지적하신 내용들이 강화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좋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으로 안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저희 문예기금 사업들 중에서 공연단체들의 창작활동에서 공연장대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드리고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해의 공모사업 단체 추진을 의결해 주신 사업이고요. 1년에 한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원신청접수는 7월에서 8월까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1,183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장르별 금액과 건수는 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수월성, 창작 쪽의 우수함을 보기보다는 공연예술현장의 씨앗을 뿌리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연단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연장대관의 부분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지원심의 추진 개요를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저희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 후보단과 유관기관 임직원 중에서 필요한 분야를 안배하고 적격자 지정방식에 의해서 분야별로 3배수 이상으로 정한 후 장르별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고요. 각 분야별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가, 나, 다 순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이라든지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구성을 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분야 서류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자료들을 심의위원님들께 보내드려서 충분히 사업내용을 서류를 검토하게 해 드렸고요. 대관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신청단체들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격사항이 있는지? 또는 증빙자료에서 신청한 금액과 실제 증빙자료에 차이가 있는지를 스크린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심의건수는 1,183건 중에서 47건이 행정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제외한 1,136건이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의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 지원심의 추진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본 요건이 국내 소재의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대관료, 여기에서 대관료는 공연을 할 때의 대관료와 공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한 신청인·단체가 복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단체들과 예술가들에게 혜택을 위해서 1개 단체별로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공연장 자체나 신청단체가 수도권에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역 간 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심의를 하면서, 심의가 1차와 2차 심의가 아니라 올해 1번 있는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고 어떤 분야에서 잔여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분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지원심의결과입니다.

총 1,18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전체 예산이 29억 원이었고 29억 원이 모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결과에서 총 87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극 232건, 무용 41건이고요. 음악은 특성상 독주회나 연주회 등 개인 신청이 많았던 관계로 신청건수가 많았고요. 이에 대비해서 선정건수도 554건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이 43건입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 신청건수와 선정건수 그리고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참고로 지역별 선정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경우 지역에 대한 우선 안배를 하였고요. 그래서 전체 신청건수 대비해서 수도권의 선정비율보다는 비수도권의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약간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훨씬 많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지역 쪽의 홍보 등을 확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제척 및 회피 현황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제척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회피는 총 7인이 하였고 9건이 심의회 회피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 심의회 회피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결격사항은 총 47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문예기금에서 같은 사업으로 중복 수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미 문예기금사업으로 중복 선정이 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또는 이 사업이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12월부터 하는 사업은 내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초과된 경우. 그리고 등록공연장이 아닌 미등록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 문예기금 자체가 한국 국적인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선정명단은 24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 773호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32쪽을 보면 주식회사가 5개나 있는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해도 되나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순수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대상이 열려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 기획사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이 행사가 너무나 영리추구적인 행사인지 등을 놓고 논의를 하시고 채점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기숙 위원

- 제가 예술가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볼 때 이것은 웬만하면 주는 사업인데 떨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슬퍼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고 어느 정도 기준치에 달하면 다 줘야 할 것 같은데 떨어진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고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보시면 분야별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아까 지역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영리적인 부분이나 기획사,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1개 단체에서 여러 건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평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마추어라든지, 그런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보다는 점수를 낮게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강윤주 위원

- 심의평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장르별 심의위원들이 논의사항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94쪽을 보면 무용분야의 심의위원께서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공연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기에 ‘사후지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공연’된 작품과 ‘공연예정’인 작품이 함께 심사되어 평가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대관료 산출 기준이 정리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설명된 상황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일단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이 섞여 있다는 것은, 대관료지원 사업은 예전에 진행할 때는 금액 등이 있을 때는 거의 매월 승인을 하거나 분기별 심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후지원이라는 것은 먼저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것입니다만, 올해는 심의를 한번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도 중반에 접수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그러니까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금액이 지급

된 것으로 신청한 부분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된 부분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혼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내년에 사업개선을 할 때 분기별이나 달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관료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공연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공연장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부대시설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곳은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개선을 할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횡수가 연간 4회인 경우도 있었고 2회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사후지원과 사전지원이 혼재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행사를 직접 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은 특성상 대관료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예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가 여러 번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하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여러 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분기별로 심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2번밖에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 1번만 심의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과정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인지에 여쭙본 것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예, 유동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예산 자체가 없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너무 적어진 것은 현장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횡수나 신청을 받는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면 현장 예술인들도 헛갈리시겠네요. 운영비 예산이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황당하네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조직개편이 되면서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이런 것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아닙니다. 이 사업은 너무 많아서 특이한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지원사업의 안정성,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료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받는 사업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작년과 같은 시점에서 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올해도 현장에 대해서 죄송스러웠고요. 심의개선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저는 걱정이 돼서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액수가 적더라도 많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들만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연극하고 무용을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떨어졌고 전에 위원을 하셨던 분이 “위원이 바뀌니까 탈락을 시키느냐?” 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까지 안 주면 우리가 욕을 먹거든요. 작은 돈이라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1,000만 원짜리 주식회사는 막 주고 여기는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0만 원도 안 주면 문제 제기가 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이것은 사업개선을 할 때 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아시겠지만 롯데홀 같은 경우 부가세까지 하면 1,100만 원이거든요. 예술의 전당도 오페라하우스는 한 달 대관료가 억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2,000~2,500만 원의 한도로 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단체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도는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결과는 부서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채점순위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많

이 주고자 노력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들은 하겠지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충분히 옳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취지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상황도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어지간하면 다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충 받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탈락된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이것의 기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의평에 보면 그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독주회, 독창회가 굉장히 많아요. 50몇 건 중에 거의 42%가 독주회, 독창회입니다. 독주회, 독창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비주류악기나 젊은 친구들이 한다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독주회, 독창회가 어떤 기획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었는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면밀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지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쭙봤는데요. 개인이 신청한 것은 3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경우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단체가 하는데 음악은 독창회, 독주회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지는데요. 사실 지역안배를 했지만 이 지역이 대표자의 주거지 지역입니다. 공연이 수행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라고 해도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나 앞에 3년 동안 받은 분들이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고 압도적으로 많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정말 공연장 같은 경우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단체의 소재지는 지역이지만 음악 같은 경우 특히 예술의 전당이나 서울 지역 공연장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시간을 주고 별도공모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본부장 얘기와 부장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지금 짧은 논의지만 논의를 정리하면 취지, 방식, 심의방법, 심의기준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음악장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장르별 안배, 정확성 문제, 공연기획사 포함문제 그리고 대관료 산출 액수

의 타당성 기준마련 문제 등 전방위적입니다. 거의 전방위적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심의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개선(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회경 위원

- 공식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를 그럴 때 구성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회경 위원

- 소위원회의 형태보다는 이것을 위한...

○박종관 위원장

- 실제 저희 정관에 의존하면, 위원회에서 무슨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소위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한시적인 활동을 하는 소위원회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은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주식회사가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음악계 기획사들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까지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나 단체의 지원인데 어디는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 바꾸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돌아보니 한도, 심의방법, 지원주체 등이 다시 문제 제기가 된다면 현황에 맞춰서 다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되어 왔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경 위원

- 음악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554건에 14억입니다. 14억에 42%가 개인 독주회, 독창회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 몇 개만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독주회, 독창회는 그냥 개인 실적입니다. 그리고 개인 실적은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몰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좋은 연주도 있습니다만, 국가예산 14억을 들인 사업인데 많은 부분들이 개인 실적을 위한 예산으로 쓰인다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아마 사업의 취지와 기대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위의 형식으로 할 사안인지 아니면 장르회의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인

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조기숙 위원

-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고요. 기존에 평가소위가 있으니까 평가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이희경 위원

-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장르가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실 분들을 포섭해서 자문회의처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죄송합니다.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문회의는 사업이 끝나면 매번 심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주문 사항은 심의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개선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짧게 논의를 했지만 개선방식이 필요해 보이니까 개선(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나눠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봉 위원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용 쪽의 3개 단체가 결격사유로 클라우드펀딩 중복수혜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펀딩을 했기 때문에 중복수혜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펀딩은 민간지원이고 클라우드펀딩은 장소 사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기 위해 클라우드펀딩을 하는 것이고 그 안의 일부가 공연장대관과 관련된 비용인 것인데요. 클라우드펀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공공지원의 중복수혜가 아니라 민관이 후원하는 부분을 중복수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나종영 위원

-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음악 부분에 보면 떨어진 것이 있잖아요? 53페이지를 보면 '사단법인 A'는 5건입니다. 55페이지 B도 3건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C' 3건, 61페이지 D 3건, E 3건 등인데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만 원을 신청하고 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씩 가져갑니다. 이것이 수월성을 갖고 입증되나요?

○이희경 위원

-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 심의기준을 만들 때 1개의 개인이나 단체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분명히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마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장르는 보지를 않았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선정할 때 5건씩 선정을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먼저 크라우드펀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원위원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이 발생되면 200만 원의 매칭지원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판단된 것 같고요. 지금 나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현장의 이해 요구는 한 단체가 1년에 1번을 할 수 있지만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3~4건을 할 수도 있는데 매번 제작비는 고정비로서 의상비 등은 있는데 대관료는 옮겨가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아니라 1,500만 원의 한도를 넣었습니다. 1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50만 원짜리 10번을 해도 되는 사업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서 건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넘겼던 부분입니다. 만약 단체 당 1건만 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종영 위원

-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몇 건을 하더라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A씨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했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세 실기획의 B씨는 지원사업명이 달라요. 순회가 아닙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지원신청자가 신청자명을 쓸 때 지원심의 시스템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줄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서 내에 있는 실제 사업명을 기재했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나종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단체는 같은 공연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다른 공연을 서울에서 1번, 부산에서 1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저

회가 안 하고 다만 금액으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실기획은 어떤 공연 사업명을 바꾸더라도 다 되고 떨어진 분들은 몇 개를 신청해도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숙 위원

-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종영 위원님이나 저나 어떤 사람은 4개를 했는데 모두 되고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1개를 했는데 안 됐을 때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보고를 할 때 설계를 잘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위원님들도 그 설계를 보고 작년 것을 비교해서 꼼꼼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보고는 나중에 하고 회의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의견을 줘야 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가거든요. 내년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설계하기 전에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의견 나온 것들은 공모가 나가기 전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기준을 주고 설계를 잘 해서 줘야죠. 이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술위 전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시고 공모가 나가기 전에 해당되는 분들과 깊이 상의를 해서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은 사업평가소위에서 이것을 한번 다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데이터는 정말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에 대한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자료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기 때문이에요. 공연장이 어디고 지원신청금액이 얼마인지는 있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그런데 시간이 엄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바쁘시잖아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사실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분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까지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박종관 위원장

- 나머지는 실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는 사실 이 결과분석도 결과분석인데요. 사업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나종영 위원

- 문학의 우수도서를 선정할 때 1개 출판사에 5개는 못하게 하거든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5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우다보니까 최영선 씨는 9건이 되었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기획사입니다.

○나종영 위원

- 어쨌든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1,500만 원을 모두 주려고 하지 말고 실링이 있으면 실링과 횟수는 동시에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악 같은 경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개인은 대관 계약을 하기가 힘들고 기획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예음이 예술의 전당과 계약을 하는데 돈은 모두 개인이 내거든요. 그래서 예음에 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예술가에게 지급된 것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각 장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은 나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주 위원

- 중복된 발언인데요. 지금 787건 중에서 204건이 ‘부’입니다. ‘가’ 중에서 한 사람이 5개가 있고요. 55페이지를 보면 3개가 있습니다. 63페이지 4건, 65페이지 2건, 66페이지 2건입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는 5건이 있고, 70페이지는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백 몇 건이 ‘부’가 되었는데 ‘가’ 중에서 중복된 건이... 한 사람이 4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블랙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모든 위원님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66페이지 하단의 443번부터 451번까지 ‘현대문화’ 라고 해서 9건인데요. 내역을 보시면 단체가 모두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관 계약서의 주체가 대관신청을 하라고 해서 ‘현대문화’ 라고 하는 기획사가 대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자기들 기획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각 예술가들은 다릅니다. 지원금도 ‘현대문화’를 통해서 각 개인 예술가들에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대문화’ 라는 한 단체에게 지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전체 총액제한은 단체 당 1,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니까 내역의 단체가 다르더라도 1인이 5~6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내역 자체가 달라도 한 사람에 1건만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4건, 5건, 6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일단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요. 차후에 논의를 해야 할 것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연은 굉장한 특혜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갤러리를 대관하거나 지원해 주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일종의 투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예 시각은 개인을 지원하지 않죠.

○강홍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실정은 그러한데 공연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르간의 편차도 존재하는 것이죠.

○강홍구 위원

- 사실 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왜 그런가요?

○강홍구 위원

- 공연 쪽 단체의 목소리가 큰 것이죠.

○이희경 위원

-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심의위원 구성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음악 부분에 보면 이 분이 뭘 하는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학의 겸임교수라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작곡가', '음악평론' 등으로 이 사람의 활동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뭘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앞에는 '음악이론' 이고 두 번째는 '피아니스트'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분의 활동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직책을 쓰기보다는 그 분의 활동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약력을 보장하라는 말씀인가요?

○이희경 위원

- 보장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들어왔는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요. '대학교수' 라고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심의에서 이 분을 왜 위촉했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직책을 적는 게 공공기관의 관행이라서요.

○이희경 위원

- 관행인가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현직을 적습니다.

○나종영 위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말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현직이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왔을 때와 지금이 틀리고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위원들이 오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만약 현직을 써야 한다면 이 분이 어느 분야에서 뭘 하는 분인지는 최소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긴 논의가 있었습시다만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2019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서 반대를 하는데요.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부분에서 1:1매칭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펀딩을 하면 문화예술후원금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 사업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매칭펀드 지원이 1:1지원인가요? 아니면 일괄로 200만 원 지원인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한도액이 200만 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당장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김기봉 위원과 똑같은 게 공금했는데요.

○김기봉 위원

- 제가 후원한 단체가 그것에 걸려서 안 되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던 차라리 크라우드펀딩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희경 위원

- 그렇죠.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사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갈 때 중복이 안 된다고 이미 공지가 나갔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아까 저와 얘기를 하실 때 그 사업이 20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대관료로 가지 않았다면.

○전효관 사무처장

- 자기가 후원액을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후원액이 달성되어야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진행비도 있을 것이고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문예진흥기금을 받으면 중복사업이 안 된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관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중복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바꾸면 내년도 사업에 적용하면 되겠지만 2019년도 사업의 원칙은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드는데요. 중장기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레퍼토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러니까 동일사업으로 그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두 분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승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이승정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8대 2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 방식, 심의기준, 심의방법 그리고 효과성 그 다음에 강홍구 위원님의 의견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것을 공연에 한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장르별 안배 문제는 아마 강홍구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연기획사의 지원범위 포함 문제, 대관료산출액수의 타당성,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수조사문제, 시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한액을 설정해서 웬만하면 전체 요구한 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광범위한 안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실천(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사무처장이 얘기를 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가 나와서요. 오늘 의결을 내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년도 사업(안)을 개선한다는 것이 위원회 의결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별도로 의결할 필요는 없겠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논의수순과 개선(안)의 수순을 잡아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결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774호 2020년 제1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 22일 화요일에 선정위원회를 늦게까지 열었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결과를 미리 서면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침은 일전에 보고 드렸던 후보단 운영기본계획 그다음에 후보단 선정위원회 구성방안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의결 받았던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성과 책임성 부분은 당연직 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사회적 기준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4인을 위촉하였습니다. 명단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통합선정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0인이 참석하였고요. 참석자는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방법은 심의 전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소 자격 기준 및 전문성에 대한 사전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장르별 선정기준 및 사전검토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그룹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정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참석하신 12인의 위원님들이 통합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결과를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고가 나갔던 부분은 활동경력 10년이 나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에 나와 있는 1호부터 4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으로 나갔었는데요.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한 후보자가 있었고요. 이 분들 중에서 약 8명이 심의위원으로 모시기 충분하다는 통합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일단 심사위원 후보단으로 모시고요. 저희 공고문에 7조 5호에 해당되었습니다.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다음 분기 때는 열어놓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선정된 분들은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를 하면서 외부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령대별로 과연 획일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10년이 안 되더라도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대중문화 및 아마추어 활동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하신 분들 중에 대중음악이나 재즈, 스트릿댄스 등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분들은 장르별 보다는 문화일반 분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자이기는 하지만 저희 사업과 부합되지 않은 분야는 전문가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활동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성가대, 학원선생님, 백일장, 대학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적었는데 이 분들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활동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분야 또는 세부장르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요.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사업 분류기준에 따라 더 적합한 분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선택한 전문분야 2개 주 1개만 적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전문분야를 이동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문화일반 분야 선정기준 논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활동경력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였는데 연령대별 경력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문화예술 공공기관장의 경우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신청했을 경우 심의위원으로 모시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모시고 공공기관 재직 중에는 활동정지로 해 놓고 실제 심의위원 후보단 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 심의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자의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가능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사무처에서 고민한 바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사 기준을 준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 구속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정비 부분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 적격자 지정방식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결과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단 선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80명입니다. 선택한 분류건수로 따지면 1,89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성이 42%, 지역이 26.4%, 30대~40대 등 50대 미만이 34.2%였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486명 중에 431명이 선정되어서 약 55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 따지면 784건 이었는데 66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40명 중에 갈아타신 분들을 계산해 보면 749명을 넣었을 때 1,180명이 나오는 것이 기존의 1,239건을 더해서 1,89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신규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은 여성과 지역이 기존에 있던 풀에 비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30대~40대 비율이 약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야 변경을 해야 할 분이 총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야 간 변경이 12명이고 분야 내 세부장르 변경이 11명이 있어서 총 23명입니다. 이 23명은 어쨌든 본인이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분야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23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절대로 자기는 옮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신청하신 분을 모시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원은 약간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총 1,180명이고 기존 인원과 신청인원 확정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749명에 431명을 합치면 총 1,180명이 되겠습니다.

확정인원 431명 중에 자기가 신청한 모든 분야에 모두 선정이 되신 분,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야가 1개 분야가 될 수 있고 2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두 선정되신 분들은 415명이구요. 신청분야 2개 중에 1개만 선정되신 분들이 16명입니다.

세부분야 선택은 총 1,899건인데요. 기존 부분, 그러니까 이미 1,040명에 해당되었던 749명에 대한 기존 부분에 대해서 각 장르별 세부분야 카운트를 했고요. 신청확정에서 총계를 냈습니다. 기존 문학의 시를 예로 들면 기존 67건에 확정 29건을 더해서 96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에 취약한지? 문화일반 분야는 인원은 적지만 건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본인의 회원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명단이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전문가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심의위원 후보단 대상자가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작업해서 후보단으로 모시게 되면 심의전문가 회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한 역할 부분, 심의위원의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구성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붙임자료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심의위원 후보단 확정 내역이 붙임2가 되겠고요. 붙임1은 저희가 연락드릴 23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스템에서 심의전문가 회원으로 옮길 것이고요. 수요일 오전에 위원 및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적격자 지정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아마 이 분들이 창작사업 중심으로 봤을 때 정해진 서식을 만들고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적격자 2배수를 만들어서 메일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면 위원님들이 적격자로 생각하는 분들을 써서 다시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적격자 지정방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민감한 사항이 아닌 내용을 정리한 엑셀과 일과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세부내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안내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시스템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 부분, 그리고 심의위원 적격자 추천 시 다양성 배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가이드 부분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정심의부에서 28개 사업에 대해서 적격자 지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통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한 다음에 각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위원님들께 정리한 서식을 바탕으로 연락드리고요.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번호 774호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짧은 수정요청입니다.

5페이지에 향유사업과 관련된 대중문화에서 대중음악, 재즈, 스트릿댄스 등은 문화일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악일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문화일반과 음악일반이 섞여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문화일반에 이런 것을 할 항목이 없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음악일반 또는 문화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그날 김혁수 위원님께서 안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논의사항에 그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규 명단 중에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를 통과했지만 이후에 운영 면에서 이 분들은 최소 2~3년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처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그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백서에 있는 분으로 한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 블랙리스트 백서에 이름이 거명된 분들은 최소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주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5쪽의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게 옳바르겠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말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요. 제가 자꾸 지역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이 26%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 후보단 중에 강원도, 충청북도도 한 분도 없어요. 전남도 한 분이 계시고 대구경북에 1명이 있고 강원도와 충북은 전혀 없어요. 신청하신 분들만 하지만 충북이나 강원도, 전남 등 소외된 경상북도, 대구는 거의 없어요. 1~2명 있는데요. 이런

쪽의 문화재단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데에 계신 분들도 심의위원 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대로 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26%에서 40% 정도의 목표를 두고 2차에서라도 추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이라는 이름을 빼야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문화일반은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세부장르에서 보면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승정 위원

- 노력을 하자는 말이죠.

○이희경 위원

-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이번이 1차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래서 그쪽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한문연에서 홍보를 해 주시죠.

○이승정 위원

- 결과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아까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백서에 이름이 있는 분. 제가 백서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김혁수 위원

-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백서의 거론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조사확인 대상자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것을 명확히 해야죠.

○박종관 위원장

- 김혁수 위원님, 그 부분이 위원회 논의사항이죠.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은..... 그 분도 아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거론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2~3년 간 휴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술인들 특히 블랙리스트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사안이 알려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그냥 유아무야 묻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하고..... 이것이야 말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하고 반성해서 액션을 이렇게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차라고 하셨는데 2차로 가기 전에 그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다음날 연락을 주셨는데요. 심의결과 발표할 때 심의위원 명단이 나갔을 때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자기도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부터 당장 풀을 써야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관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술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는 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종관 위원장

- 백서만으로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 날 나왔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백서 내에 있지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사무처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것이 확인될 경

우에는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정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확인이라고 하는데 수사대상자거나 징계확정자 정도를 분명하게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기관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현장예술인으로 심의 풀에 있는 분들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저도 현장에서 거론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거론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탈락시킨다?

○이희경 위원

- 탈락은 아니고요.

○김혁수 위원

- 그것은 오히려 기관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거꾸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선출 감사

- 지금 사무처에서 파악한 분들이 있습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없습니다.

○김선출 감사

- 1차적으로 징계부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때는 기관을 담당했던, 그 당시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는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사무국과 위원회 주도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심의방침을 권고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당시 상황을 알았을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사업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폐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백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내용이 없이 심의 의도에 순응내지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지침으로 공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매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죠.

○강홍구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해서 법적 조치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리고 애매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었거나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 사안별로 밝혀내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에 참여했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김혁수 위원

-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국지역문화재단의 회장을 할 때 블랙리스트 단체로 찍혀서 법인 인정도 못 받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문화부에 쫓아 다녀도 인정을 안 해 주고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전지협 회장이라고 해서요. 당시 위원회 위원장님이 저희가 원로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몇 분을 강제로 바꾸더라고요. 강제로 바뀌서 내려왔는데 그 분이 그런 분이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지협도 피해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저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가해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고 감사님이 말씀하신 현장예술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이희경 위원

-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백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연극분야는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분의 뜻은 지금 우리가 했던 연극, 뮤지컬 명단에 몇 분이 보이시나봐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분을 올리는데..... 명단이 발표되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이희경 위원

- 그랬을 올해나 내년에 심사할 때 이 분들의 모습이 보이면 연극계에서, 특히 피해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김혁수 위원

-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이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이회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하려면 내부 기준을 정해야죠.

○전효관 사무처장

-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로 확정된 부분들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것은 이견이 없어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일종의 관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리뷰하는 장치를 하나 설치하면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까지 논의될 정도면 당시 위원장님이 임명하신 심사위원은 싹 빼야 됩니다.

○이승정 위원

- 이러면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서약서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분들은 본인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요.

○이회경 위원

- 그것은 더 이상하죠.

○나종영 위원

- 더 이상하죠.

○이승정 위원

- 본인 스스로 그런 데에 관여를 했거나 거론된 사람이 심사위원 풀에 응모를 했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설명하더라도 함부로 못 하게 의결사항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소 어려운 사안이라도 블랙리스트와 단절한다는 의지를 현장에 보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게 심의위원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기

준을 갖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은 수사의뢰대상자나 징계확정자를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무처장이 정리한 대로 어떤 장치를 가지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는 이행협치추진단이 통합해서 일하고 있죠?

○이희경 위원

- 죄송한데 백서에 거론된 분들이 대충 몇 분인지를 알 수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먼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행협치추진단이 총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이행협치추진단에서 후속조치와 기업과 관련된 것들은.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심사위원회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

○전효관 사무처장

- 예. 기관조차도 영진위나 국립극단 등을 논의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명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조금 읽어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도 관여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로 놓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혐의가 있는 분들이 파악될 경우에는 심의위원 위촉 전에 검토하는 단위를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 기준이 충돌되는 것이라서요. 오늘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그것에 따른 법적 부작용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혁수 위원

- 아까 이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도 심사위원들이 각서를 쓰잖아요? 다른 내용이지만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블랙리스트’ 라는 단어는 안 넣더라도 보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해서 심사 전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정 위원

- 우리 순천에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한 대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예술위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다면 빠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자꾸 만들면.....그 다음에 백서가 오픈되어서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이 세련되지 못 했는데요. 그 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리 내부시스템을 얘기하자면 블랙리스트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은 감사부서입니다. 감사부서가 광범위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감사부서에서 상당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기는 하죠.

○나종영 위원

- 다른 예술 분야는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심의위원 얘기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관이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관의 기관장은 가해자였어요. 그런데 실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못 받고 블랙리스트 가해자인 블랙리스트 기관의 대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되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의뢰를 받은 경우는 분명하니까 하지만 혐의를 가졌다고 해서..... 이런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자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윤리강령을 받은 데에 한 줄을 써서 한다거나 하죠. 우리가 혐의만 있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원만한 방법으로, 만약 그 분이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았지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단을 해서 “당신은 블랙리스트니까 심의위원 풀에도 못 들어간다.” 이것은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의뢰를 받지 않은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풀에서 겁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원안 가결에 동의하고요. 사무처나 감사부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김선출 감사

- 우리의 선정기준, 심의위원 풀에 성폭력이나 수정수급 등의 조항이 있죠. 여기에 블랙

리스트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죠?

○전효관 사무처장

-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없습니다. 명단은 사무처에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기관 자체가 임명한 심의위원이었는데요. 기관의 잘못을 심의위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제 3의 단체가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심의위원에서 배제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무처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장 본부장의 의견은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난국을 겪은 예술위 사무처가 또다시 어떤 배제와 관련된 또는 이와 비슷한 명단을 사무처 스스로 작성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깊이 참고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강홍구 위원

- 예, 사무처와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항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규정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안은 의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이승정 위원님이 제안한 방식도 있는데요. 성안을 시켜야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토대로 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논의를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문제는 심의위원선정위원회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을 역임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그 분이 일정정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가

어떤 입장인지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고요. 이후에 반드시 “어떻게 처리를 했냐?” 라고 물어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분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직접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왜냐 하면 심의선정위원을 탈락시키는 자리니까요. 이런 이유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위 문화예술계에서 이름이 올라가신 분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통과를 시켰거든요. 블랙리스트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서 세모로 표시를 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을 제기하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해주시고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김기봉 위원

-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 행동의 일관성 때문에 블랙에 잠정적으로 심증이 가는 분은 있었지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가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제기된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31일 이전에 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시스템을 그럴 수 있는지, 또 어떤 체계를 봐야 될 지에 대한 내부 계획을 위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위원회의 의견이 그러하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시스템이 대응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를 의결할까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보고사항이 남았고 보고사항이 10건인데요. 보고사항을 정리할 겸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이 10건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에 정기대관에 관한 공모계획이고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아르코예술극장의 경우 축제 및 국제 행사를 우선 대관하고요. 공연관련 전국단위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도 진행하는데요. 단, 2020년에 변경되는 부분은 심사 자체를 축제와 일반 공연단체를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축제에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2020년에는 심사를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 같은 경우 신진예술가·단체의 발굴 및 배출 플랫폼 공연장으로 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로극장 같은 경우 일반 공연예술단체 중심으로 대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방침으로는 근로기준법 준수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최소 무대작업일 및 1일 휴게시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의무시행에 따른 대관단체 필수 시행도 2020년도 주요 추진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대관신청서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간략하게 개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의 공모 추진 개요를 보시면 극장별로 대관 가능 일수가 나와 있는데요. 아르코극장과 대학로극장의 대관대상 및 대관가능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제외하는 기간은 자체·기획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작산실이라든지 창작아카데미, 공연장상주단체, 국제공연예술제 등을 제외하고요. 극장의 보수 및 안전점검, 휴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으로 4개 공연장에 613일을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공모제외 기간 등이 나와 있고요.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자격이나 신청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요. 제외 대상은 서면으로 같음하고 지원내용도 서면으로 같음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뭐가 바뀌고 변한 것이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작년에 진행했던 공간별 차별화를 유사하게 진행하되 심사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축제 단체와 일반 단체가 같은 공연장에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 단체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르코예술극장의 대극장을 축제 중심으로 하면서.

○박종관 위원장

- 공연장 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보고 받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혁수 위원

- 자체에서 뺀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은 '연극의 해'이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혹시 왔습니까?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그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혁수 위원

- 아직 안 왔어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내년이 '연극의 해'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는 차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적인 기획서에는 7월 한 달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3월 27일은 연극의 날이니까 행사나 공연을 하는 것으로 문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서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뀐 후에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에도 오지 않은 것이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전효관 사무처장

- 다른 쪽을 통해서도 연극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공연장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혁수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접수를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이것은 보고죠.

○박종관 위원장

- 네,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김혁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고 사무처장이 답변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협약 및 배분(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황진수 본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104페이지부터인데 시간상 119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는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공연장상주단체 관련해서 지역협력소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10년 이상 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 패러다임이 바뀌어

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분권과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역의 기초 문화예술사업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탐다운 방식으로 예술위원회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방식으로는 예산확보가 장기적으로 불투명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지역주도형사업으로 개편하고자 방향을 설정하고요. 방식으로는 현장과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협치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수렴을 지난 8월 29일과 30일 실무자들과 1차로 했고요. 10월 11일에는 본부장급과 시도 공무원들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안)을 만들었고 붙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64억 정도인데 지역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10년 동안 조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5개의 기준입니다.

106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5개의 %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와 수요 부분의 2가지와 공급 부분의 2가지입니다.

이 배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봐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질문을 하시죠.

○이희경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020년에 저희한테 61억이 나와 있는 겁니까?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이희경 위원

- 올해부터 지역으로 이양이 되는 건가요?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안 되는데요. 이양이 될 뻔한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이양이 안 되고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예. 이양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이양사업은 아닙니다.

○이승정 위원

-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예술위에서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역마다 문예회관에 상주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문 예술가들의 일자리거든요.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 있는 예술인들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85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65억이었고 내년에는 61억이 되었고요. 내후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한테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래서 협약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요?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예, 맞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이게 없으면 공연예술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매칭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 예산도 광역 같은 경우 이미 편성(안)이 나와서 회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광역에서 편성을 다 한 건가요?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이 없으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아르코비전 2030 선포식 개최결과 및 후속 계획 보고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박두현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죠.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회의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화요일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아르코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후속조치로는 먼저 비전2030 실행을 위한 조직 정비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장과 아르코미술관장 선정을 위한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서를 일부 개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비전전략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된 전략체계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현장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비전전략보고서를 내년 6월쯤 발간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위원회에서 개정이 되면 절차상 1월 중순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여기 2030에 보면 예술가치확산에 대해서 핵심의제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의제를 발굴하는 부서가 그런 논의까지도 하게 되나요? 2030에 보면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체 내에 조직을 만들겠다는 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비전전략체계가 되면 그에 따라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제별로 각 부서가 지정되고 그에 대한 것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신설부서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요. 가치확산에 대한 부분은 몇 개의 부서가 나뉘어 있는데요. 세부 과제가 있는데 과제에 따라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아마 저희가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저희 후원센터만 하더라도 메세나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요. 말하자면 기관 간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핵심 사업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협치 같은 것들을 재설정하는 작업들을 후속작업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집행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해서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 사업으로 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6~7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까지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할 것 같고요. 예술가치에 대한 프레임이나 지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연결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업으로 된다

면 정책부서에서 그런 작업을 담당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술계 쪽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사회의 영역에서는 GNP라는 국가목표체계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 것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 비전을 보고 연결이 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약간 신규사업 같은 것들을 1월이나 2월에 제안해 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부서 개편에서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사무처 조직 부분은 전략과제에 따라서 사업과제는 사업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할 텐데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기금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같이 깊이 이해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 문제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어서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관한 완화책을 찾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임시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공모사업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만들었는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주시면 추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과 수도권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동등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최소보장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신청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5%를 담보해 주는 것을 유지하고요. 25%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이 신청한 신청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불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쪽을 보시면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마감된 2020년 문예기금 정시공모 사업 신청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도권 신청비율이 83%인데 선정률을 83% 유지하겠다고 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25%를 넘었을 경우 최소한 25%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의 사업을 보면 문학 비평 및 연구조사 같은 경우 비수도권이 22%로 신청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5% 이하지만 적어도 25% 선정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면 개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은 작년에 40% 쿼터제를 운영했었고, 실제로 38%의 지역 선정률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역사업설명회 때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은 지역우대를 하겠다는 정도의 문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때 권고사항이지만 1:1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경우 지역이 이미 44% 정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선정률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예기금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 사업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 위원회 사업목적상 적용이 매우 부적절한 사업도 있고 국가차원에서 저희 문예기금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거버넌스 측면에서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전체 지원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논의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그 안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역할적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와 거기에 맞는 몇 가지 사업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 저희 장기과제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적용 검토대상사업은 불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마감된 사업을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정리하고 나눠 봤는데 약 75% 대 2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최소보장제를 실시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시공모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목적 자체나 이 사업을 기획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경우 또는 신청률을 고려했을 때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업목적의 취지에서는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시공모가 나간 것들 중에 창작뮤지컬해외유통 사업이나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은 아예 지역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28개 정시공모 사업 외에 저희가 11월부터 공모가 나갈 것인데요. 2019년 결과를 고려했을 때 별도공모 중 적용 검토대상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도의 지원 선정결과 지역이 몇 %가 선정되었느냐를 가지고 검토했을 때 검토대상 사업을 보면 아르코창작기금 같은 경우 2019년 선정결과 지역이 44%였고요. 공연예술창작실험활동 17%, 대한민국공연예술제 37%,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은 약 28%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 2018년 공연장대관료지원은 지역이 15%, 신나는 예술여행은 44%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지원심의처리기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별로 검토하고 각각의 사업별로 내부적으로 지원심의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붙임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6시에 마감이 되었고요. 전체 28개 사업에 총 2,053건이 접수되었고 수도권이 75.1%, 지역이 24.9입니다. 제가 현재 신청될 비율을 봤을 때 25%를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는 올해 전반적으로 지역의 신청률이 25%이기 때문에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선정률 최소 25%를 보장하고 25%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률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25% 이상인 사업은 문학 같은 경우 문예지발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이고요. 시각 같은 경우 전시지원, 공간지원(사립미술관)이고 예술인력육성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레퍼토리와 국제교류 같은 경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25% 이상의 사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표에 최소보장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9년도에 실제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비율이 얼마인지를 참고로 보시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으니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공모를 나갈 때 안내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산실이나 국제교류 같은 경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지원결과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 조금 더 보태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신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사업구조 속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020년 사업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논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전체적인 예술지원 체계에서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전체적인 지역균형지원 체계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결과를 보시면 대략 아시겠지만 최소보장이라는 장치를 뒤서 심의과정 운영에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불균형 해소와 관련되어 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사업구조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를 빨리 해 보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 공모 나가는 것에는 정책적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윤주 위원

-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예술위에서 주는 예술지원액의 지역불균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신청비율이 2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그에 따라서 선정률이 낮은 것인데요. 예술위 정도의 기관이면 인프라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술계 내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죠. 예술계와 예술계 밖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지원율을 어느 정도 높인다는 것만 하지 말고요. 다른 문제지만 청년문제를 얘기할 때도 청년을 자꾸 지역으로 내려 보내서 일을 하게 하자고 하지만 사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수치를 높여서 성과를 높이려는 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 정도의 기관이고 예술인의 친구가 되려면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조금 더 큰 구도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래서 저희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나눴는데요.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적 현안입니다. 지금 정책기획위원회에 2030년 우리나라 행정체계 개편(안)과 패러다임을 개편(안)을 짜고 있거든요. 지역 개편(안)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최근에 논의되는 콤팩트시티나 지역 내의 광역인프라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위원회 내부에서 할 일과 위원회가 연계해서 예술계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말씀을 보태면, 21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제의를 하겠다고 방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문체부에서 제의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시 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복잡한 문제를 유발 시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거시 틀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위원회 내에서 최소보장제라는 의미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지역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도도 따라와야 하고 여타 다른 분야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 필요도 있는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우선 당장은 2020년 정기공모를 이렇게 운영해 보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 중반에 있는 사업들 속에서 추가로 적용해 나가면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보

인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창작산실의 경우 전면적으로 지역에 쿼터를 주거나 할당제를 할 수 없는 것은 미리 공고를 하지 않은 형태에서 역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도를 거기까지 확대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위원장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되고요. 강윤주 위원님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 보자면, 거시적인 국가차원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25% 유지가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해볼 사업은 없을지, 지금 있는 사업에서 쿼터를 만드는 방식 말고 혹시 장기적으로 시범사업으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 비전에도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도모했던 것은 사업의 네트워킹 사업이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제시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풀지 않으면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지역을 역지로 부양하는 제도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것도 그냥 저희 방안 중에 하나로 쓸 수 있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여러 개의 방안 중에 시작하는 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올해 대비 2020년도에는 비수도권의 지원건수 비율이 올라가는 사업이 7가지 사업입니다. 문예지발간지원 같은 경우에도 20%인데 내년에는 최소 25%까지 갈 수가 있고요. 문학비평 및 연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18%인데 내년에는 22%까지 최소로 가는 겁니다. 전시지원 같은 경우 현재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최소보장으로 갔을 때 올해는 14%에서 내년에는 25%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사전연구지원 같은 경우에도 15%이기 때문에 올해 0%에서 내년에는 15%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도 19%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에서 내년도에는 19%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같은 경우도 1:1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8%에서 내년도에는 50%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나마 작년에 비하면 올해 현재까지 지역 불균형 문제의 비율을 작년과 대비해 보면 2.4% 정도 완화된 것인데요. 이 수치는 미약하지만 6기 위원님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책적 기조가 7기로 이어지면서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자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최소보장제는 비수도권에 보다 많이 선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기준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25%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만큼 보장해 주고, 지역신청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을 더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25%를 유지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고민해 볼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절충안인데요. 만약 지역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45%를 신청했을 때 그 비율 45%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25%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25%가 아니라 30%가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신청건수 대비 무조건 비율을 보장한다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봤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기초부장이 말씀하신 것은 고려해 볼만 내용인데요. 그런데 신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정기 공모 이후로 꾸준히 연도 중반에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활동보고가 있는데요.

○이희경 위원

- 서면으로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서면으로 받는데 꼭 보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저희는 꼭 보고를 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도 없습니다.

○김선출 감사

- 끝난 사항인데요. 지역과 수도권 균형발전, 예술의 수월성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맞추다보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시행이 안 되면 차기 공모 때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가 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아까 검토한 바로는 공연장대관 부분들, 전남이 1건이라도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풀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향후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최소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신청자체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지역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에 대해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정보교류, 예술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원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초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중국문련과의 정기교류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문련 쪽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임명되어 오신지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순번대로 했는데요. 임기가 거의 매듭이 되는 순간까지 김혁수 위원님과 이승정 위원님은 해외교류에 참석을 못하고 임기를 거의 다 소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문련 교류에 나종영 위원님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승정 위원

- 잘 다녀오세요.

○최창주 위원

- 작년에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상호방문프로그램으로 공연까지 추진했거든요. 작년에 순번대로 가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대행으로서 작년에 중국문련의 분들이 오셔서 전통문화를 교류하자고 방법까지 제안했는데요. 그냥 작년의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공연까지 대표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마 중국 쪽에 가서 관람을 하게 될 텐데요. 최창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직접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해서 성과를 얻어 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회의를 잘 매듭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차기 회의는 11월 29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 11월 29일에 11월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6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회의종료)